

시민·도민들의 마음을 모아 50년 낙후된 설움 끊을 것

전북 발전을 위한 돌파구로 전주를 특례시로 지정해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시민들에게 급속히 퍼져나가고 있다.

이에 전주시가 '특례시'를 향한 행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전주가 특례시로 지정을 받게 되면 △부시장을 2명까지 둘 수 있고 △사립박물관·사립미술관 승인권한과 개발제한구역 지정과 해제권한 △자체 연구원 설립 등 행정권한이 주어진다.

본보는 김승수 전주시장을 찾아 특례시를 추진하게 된 배경 등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전주가 특례시를 추진하게 된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하신다면?

이번 정부가 국가적차로 추구하는 것이 대통령령에서 연방제 수준에 이르는 지방자치, 지역균형발전을 하겠다고 하셨다.

이것은 헌법적 가치이기도 하고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가치이기도 하다. 지역발전이 불균형발전을 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국가로부터 기인한다. 4~50년 전 정부가 산업을 지정해서 여기는 자동차, 여기는 제철, 여기는 조선으로 지정함에 따라 일자리가 생겨나서 인구가 이동하고 수도권 중심으로 국토가 발전했다.

전주와 전북도가 지역이 열등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정부가 결정하면서 원인이 되었다.

이 불균형의 원인을 국가가 해소해야 한다. 국가의 산업발전으로 일자리가 생긴 지역으로 인구가 쏠리고, 광역시라는 국가의 강력한 시스템으로 체계가 구축되면서 불균형을 초래하였다. 이를 깨뜨리는 것이 특례시이다.

이번 정부에서 특례시를 인구 100만 이상 수원, 고양, 용인, 창원 네 개 도시를 정했는데 이 곳을 특례시로 한다면 지역균형발전의 격차는 더 커질 것이다.

100만 도시를 특례시로 정하면 그 지역의 행정적권한은 더 커짐으로써 지방분권면에서는 더 좋아지겠지만 지역균형발전으로 보면 불균형은 더 가속화 될 것이다. 이렇게는 안 된다.

그래서 광역시가 없는 전북과 충북 두 곳의 중추도시인 전주와 청주는 반드시 특례시로 포함을 시켜야 된다. 전주시는 그럴만한 자격이 있다. 전주시는 이미 생활인구가 93만을 육박하고 완주까지 포함하면 생활인구가 100만이 훌쩍 넘어 광역시수준의 행정수요를 갖추고 있어 전주는 당연히 특례시에 포함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게 바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골고루 발전하는 헌법적 가치이자 문재인정부의 국정철



전주시가 '특례시'를 향한 행보에 총력전에 나섰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11일 김승수 전주시장과 박병술 전주시의회 의장이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전주시 특례시 지정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실시한 가운데 김승수 전주시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생활인구 93만 육박 광역시 수준 행정수요 갖춰 포함시켜야 주장 균형발전 차원 골고루 발전하는 헌법적·문재인 정부의 중요 가치 특례시 지정되면 도시 브랜드 확장·시민들의 삶에도 큰 영향 미쳐

학을 완성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에서도 의미가 있다.

▲특례시 지정시 어떤 혜택이 있는지?

부시장도 2명일 수 있고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도 전주시가 권한을 가지고 되고 전주발전의 think tank인 연구소도 지을 수 있는 많은 행정적인 권한을 가지게 됨과 동시에, 국가에 산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에서 광역별로 우선 배분할 때 광주·전남, 부산·경남, 대전·충남과는 달리 광역시 없는 전북은 반 정도의 혜택을 받아왔다. 한 건 한건이 수백억, 수천억에 해당되는 것이고 전북은 수십년 동안 차별을 받아왔다.

또한 혁신도시배분, 수소산업단지 유치 시에도 전북은 다른 지역의 절반정도만을 받았었다.

그러므로 반드시 특례시로 지정받아 실질적으로도, 광역시에 버금가는 혜택을 받고 행정적 권한 확대 및 시민의 자부심 고취에도 역할을 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도시 브랜드 확장

▲특례시 지정 결심됨?

정부가 30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에 단순히 인구수 100만을 기준으로 특례시를 지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인구가 없는 게 시민·도민들의 역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1960년대까지 인구가 260만이 넘었고 그 당시 전체인구의 10%를 차지했다. 인구가 줄어든 결정적 요인은 그 당시 정권이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시작하면서 전북은 섬유, 종이, 제지 귀금속 등을 국가산업 전략으로 지정했고 반면 다른 지역은 자동차·철강·조선·중화학공업 등 국가주도산업, 대기업 주도산업, 수출주도산업으로 밀고 가면서 그 지역에 일자리가 생겼다.

국가 산업을 정하면서 짙은 그늘이 졌다. 국가가 해소해야 한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시민들의 도시가 상품이 아니다. 기업이 아니라, 누가 잘하면 이기고 하나는 죽는 이기고

패배하는 상품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한다.

헌법의 가치도 국가균형발전, 경제균형발전이다. 이번정부가 내세우는 포용국가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존중받고 함께 행복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인구를 따지기 전에 전주와 청주는 반드시 이번 특례시에 포함되어야 한다.

두 번째 인구축면을 보면 주민등록상인구는 거주인구, 그러니까 죽어있는 통계이다. 실제 생활인구를 KT나 SKT 통계로 보면 즉 그날 생활하는 인구수를 측정할 수 있다. 교통·도로·쓰레기에 수백억원이 들어가는 데 이것은 결국은 생활인구 중심의 행정수요가 된다.

생활인구가 전주는 93만~130만이기 때문에 생활인구를 따져봐도 100만광역시에 맞먹는 수이다.

여러 가지 행정 수요중에서 자동차 등록대수 한가지만 예를 들어보자. 신규등록이나 이전건수를 보면 전주인구가 65만인데 1년에 11만 건 정도, 울산광역시는 인구는 두 배 많은데 전주와 비슷한 정도이고 100만이 넘는 고양, 용인시는 오히려 전주보다 자동차 등록건수가 더 적다. 사업체 수나 균형발전 뿐 아니라 행정수요 측면에서 전주나 청주는 100만이 넘는 행정수요를 가지고 있다.

또한 전주와 주요기관 관공서 수가 264개

다 그런데 천안은 163개, 포항은 172개, 남양주는 80개이다. 수원이 우리보다 인구가 2배 많은데 우리가 무려 80개 기관이 더 많다. 공공정책을 결정하는 중심성으로 보더라도 전주는 수요가 충분히 있다.

▲전주시가 지정을 받아야 하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는지?

광역시가 있는 곳과 없는 곳을 잠깐 말씀 전에 설명드리자면 대전이 1989년에 광역시가 됐다. 그때 대전과 전주의 예산차이가 500억정도 차이가 났다.

그런데 작년 대전과 전주의 예산 차이가 3조 6천억이다.

광주가 1986년도에 광역시가 됐다. 그 당시 광주와 전주의 예산차이가 229억이었다.

작년에는 3조 8천억 정도로 130배 넘게 차이가 났다.

광역시 유무가 그 도시 운명을 바꾸는 상황이 되었다.

대한민국 다른(지난) 정부에서도 광역시 없는 도시들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고민했다. 참여정부에서 혁신도시 만들 때 다른 지역은 다 2륙씩 받아왔다. 경남·부산, 대전·충남 다 2륙이지만 전북은 1륙이다.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격차가 수십년이 되다보니 어마어마한 차이가 생겼다.

시민 도민의 삶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도시가 무조건 크면 좋은 건 아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충분히 노력해 가져와서 시민 도민의 삶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기회가 온 것이다.

30년전에 인구부족으로 전주가 광역시가 되지 못했다. 균형발전차원에서 논의가 되었었다. 이번에도 인구가 부족해서 못하면 30년 후에는 전주, 전북도는 낙후로 소멸될 수도 있다. 반드시 해야 할 과제이다.

▲대통령 공약인가?

전주를 문화특별시로 지원하겠다는 것이 지난 대선 때의 대통령 공약이었다.

대통령공약에 광역시도 고민을 했었는데 도와 시·군의 관계때문에 전주를 문화특별시로 지정하고 지원법을 만들겠다고 했다.

제주도는 관광특별자치도로 지정해서 일년에 1조2천억씩 보충교부세 3%를 정률로 받는다.

전주시도, 전라북도도 시·군의 몫을 줄이지 않으면서 제주처럼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을 받는 걸로 하지는 공약이 들어가 있다. 정부가 지키지 않고 있어 항의중이다. 문화특별시 공약을 지키든지 특례시를 해주든지 정부가 대통령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덧붙일 말씀은?

도전하는 개인과 국가, 사회가 성장하는 것이 사실이다. 어려운 일이지만 시민, 도민의 마음을 모아 반드시 돌파해 50년 낙후의 설움을 끊겠다. /특별취재반